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 시급”

전북자치도의회 주관, 지방정치학회·여야 국회의원 8명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
“현재 방식, 지역간 불균형·대표성 약화 초래” 최소 정수 하향 조정 등 방안 제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 방식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도의회 주관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국회의원과 8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논의를 펼쳤다.

좌장을 맡은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의 진행으로,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두 교수는 인구와 행정 수요에 맞는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대표성 보완과 도시·비도시 간 편차 해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북도의회 김습지 의원은 “현재의 정수 산정 방식은 지역간 불균형과 대표성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 산정 기준 조정, 최소 정수 하향 조정, 독립적 선거구 획정위 설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경상국립대 배진석 교수는 “정치 다양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공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정치학회 이재현 회장은 “전북은 인구가 강원보다 22만명 많음에도 광역의원은 9명 적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조례로 정수를 정하고, 전북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등도 입법 취지와 현행 제도의 한계, 개정 효과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논의에 힘을 보탰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은 “지방 분권형 개헌이 논의되는 지금, 정수 산정 방식 개편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크다”며, “도의회도 제도 개선과 공론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향후 국회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19일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 방식 개선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원택·이성운·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제도 개선 제안

문승우 도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성과주의 예산체계 사각지대 발생 없어야”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정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후이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이라도 제출하게끔 의무를 부여



19일 열린 '2025 한국여성정치학교' 입학식.

도내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

전북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정치 전북정치학교 입학식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19일 '2025 한국여성정치 전북정치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치학교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건강한 정치문화 조성을 목표로 국회의장 산하 법인인 한국여성정치 후원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북 여성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참여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북정치학교 교육 과정은 △정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기능 △여성 정치인과의 만남 △디베이트 실습 △글쓰기 △스피치 △미니

연설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경남 함양군 일대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과 연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전정희 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치학교인 만큼 정치에 관심있는 여성들의 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정치학교를 통해 내적 성장을 도모하고 정치적 야망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성 기자

“송전선로 설치 문제, 시군과 힘 합쳐 대응해야”

도의회 예결특위, 2024회계연도 전북자치도 결산심사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의원)는 결산심사 2일차인 19일 미래첨단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도민안전실 등 소관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과목별 미수납액 징수 노력과 세출사업별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송전선로 설치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전북도가 한전 등 관련 기관과 조율받은 공문, 반대 대책위원회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자료 등 일체의 관련 문서를 요청했다. 또한, 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전북도에서 시군과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미래첨단산업국의 출연금 정산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사유에 대해 묻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신중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이 사업 기간 내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

도록 철저한 계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미래첨단산업국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오가노이드 등 첨단 바이오 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서 간 협업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6억여 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적정하고 정밀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미래첨단산업국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를 강조하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관련 공약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 거점형 스마트시티 선정 환영”

민주 정동영 의원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3년간 총 325억원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은 19일 “이번 사업에는 국비 160억원을 포함해 도비와 시비가 총 325억원이 투입되며, 전주는 수원과 화상을 제치고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이동식 금융서비스 △AI 의료·헬스케어 △교통약자 맞춤형 모빌리티 △AI 기반 도로 안전망 △시민참여 탄소중립 보상시스템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는 AI를 기반으로 한 ‘전주형 스마트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사업에는 KT, 현대차, 기아, 마이



크로소프트 등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과 전북은행, 전주대,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컨소

시엄이 구성됐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선정은 전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주가 전북특별자치도의 AI 선도도시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주형 스마트도시 모델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조찬포럼과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관련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이만호 기자

“시민 말씀 다시 듣고 실현하는 첫걸음”

민주 이성운 의원, 21일 '이심전심 현장민원실'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오는 21일 전주 효자동 홀플러스 앞에서 ‘이심전심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는 끝나도 민심은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현장민원실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기록하고, 다시 실현해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심전심’ 민원실은 생활 불편, 지역 현안, 정책 제언 등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개방형 현장 소통 프로그램으로, 접수된 의견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성운 의원은 “전북도민은 오랫동안 제의 국민 취급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진짜 헌법회복, 진짜 전북회복으로 응답할 때”라며, “말 잘하는 정치가 아니라 듣는 정치로, 도민과 함께 싸우겠다. 늘 도민 곁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농촌유학가정 거주시설 지원 방안 모색

박정규 도의원, 간담회 개최... “귀농귀촌 거주시설 활용 현실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농촌유학 가정의 거주시설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농촌유학을 선택한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촌유학을 선택한 학부모와 임실 청용초등학교 이은영 교장 선생님 등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주거 여건과 관련한 어려움, 행정 절차의 한계 등에 대해 토로하고, 장기적으로 농촌유학 가정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전용 거주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가능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농촌유학 가정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촌유학 가정이 귀농귀촌 거주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반대”

전국 학부모연대 등, 릴레이 1인 시위 들어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진 중인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19일 오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시작됐다.

전국 학부모연대와 전북 언론협회 소속 학부모와 단체 구성원은 19일 오전부터 전북도의회 앞에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조례안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명문화하고 확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조례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인 시위 참가자는 “성인지 예산이 처음 도입된 2010년 당시 7조원 규모였지만, 해마다 증액돼 현재는 35조원에 달한다”며 “그 예산 상당수가 여성



단체 활동이나 성인지 교육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 폐회 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도원들을 상대로 조례안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이만호 기자